

## 화학조미료 과다섭취 우려

- 즉석식품 선호에 외식 늘어나



즉석식품 구매나 외식이 늘어나면서 '숨어 있는' 화학조미료를 과다 섭취할 우려가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와 벌레먹은사과팀은 세계소비자연맹에서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화학조미료의 간접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퍼포먼스 행사를 펼쳤다.

이들 단체는 행사에서 "화학조미료는 주성분인 엘-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무려감 두통 발열 가슴통증 구역질 등 이른바 '중국음식 증후군'을 일으키고 뇌손상 천식 암 등과 연관이 높다"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좋아하는 라면 1봉지에만 1.65g의 화학조미료가 들어 있고, 프라이드치킨이나 삼겹살을 맛소금에 찍어먹는 습관

도 과다한 화학조미료를 섭취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972년부터 영아 섭취 금지, 어린이 하루섭취량 3g, 어른은 6g 등으로 엄격한 규제를 권하고 있으며, 영국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유아식품의 화학조미료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업체들이 사용금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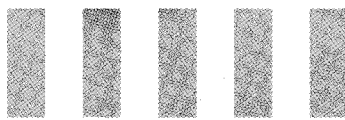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 연간 화학조미료 소비량은 3만5천~3만9천을 유지하고 있고, 거의 국내에서 소비되는 '다시다' 맛나 등 혼합조미료 생산량이 4만여t(2002년)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진미 벌레먹은사과팀장은 "채소나 야채를 먹을 때 되도록 소스류를 곁들이지 말고, 어묵·야채가공·햄·소시지 등은 조리 전에 살짝 데쳐 방부제와 첨가물을 제거하고 조리할 것"을 권했다.[한겨레]

### 환경부, 폐수배출기준 8개월만에 개정 졸속행정 빈축 실태조사도 없이 시행, 업체 모두가 기준치 초과

환경부가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특정 업종의 폐수배출 기준치를 시행한지 불과 8개월여만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해 졸속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도금업체의 총질소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60mg/에서 200mg/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도금업체에 대한 기준치 설정 때부터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반발과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기준 준수가 어렵다"는 전문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않은 채 시행했다가 업계 반발과 산업자원부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시행 이후인 2월에야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부천시에 있는 93개 도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나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피혁·안료·비료·인쇄회로기판 등 도금업종과 비슷한 폐수를 방출하는 업종들의 기준치는 그대로 둔 채 도금업종의 기준치만 대폭 완화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워 기준 준수가 곤란한 도금관련 업종의 총질소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일정기간 조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중 타업종과의 형평성도 제기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 폐현수막 활용 생활용품 제작

광주 서구 마체공원에서 지난 10월 9일 열린 '서구민 나눔의 장터'에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자활봉제팀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생활용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활봉제팀은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와 마대를 만들어 1장당 100원에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고 있다.

박선자(50)광주 서구 화정동)씨는 "폐현수막을 소각하면 엄청난 공해가 유발된다"며 "자원 재활용으로 공해의 위험도 줄이고 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바구니는 가볍고 건조가 빨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재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쌍촌사회복지관 허만희 과장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품은 한 달에 1천개 이상 만들 수 있다"며 "자활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활용상품 개발과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무등일보]

### 창원 폐기물민간위탁 갈등 증폭



창원시의 대형폐기물민간위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철회불가'와 노조의 '철회관철'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는 창원시가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시청사 정문앞에 설치됐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노조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공무원 100여명을 천막농성현장에 긴급투입, 천막을 해체하고 노조원들을 해산시킨 데 이어 오후 2시 30분께 청사 현관앞에 천막을 다시 치

## □ 【미디어로 본 환경】

고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5명을 다수의 공무원과 시청 차량들이 내몰아 노조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민주노총 경남도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천막해체를 몸으로 막으며 강력히 반발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공무원과 일용직 노조원간에 심한 고성어 오가며 폭력사태 직전까지 가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노조원 20여명은 부시장실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갖고 대형폐기물민간위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반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일단 해산한 뒤 이날 오후 6시 시청 현관 앞에 재집결한 뒤 천막 설치에 들어가는 한편 민간위탁 철회 투쟁을 계속 전개했다.

한편 창원시는 노조원들의 천막농성과 관련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장을 보낸 뒤 이날 행정 대집행 영장을 시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전격적으로 공무원을 동원, 천막을 해체하고 철거했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천막철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천막을 철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천막설치는 불법시설물이므로 제설치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일보]

### "세녹스 유통 단속의 본질은 유사휘발유"

산자부, 법원의 "품질차이 없음"소견은 문제의 본질과 달라 지적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원이 세녹스의 품질이 기존 휘발유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견해 표명과 관련, 현재 유사휘발유를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 중에 있는 (주)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판매를 재개하고 나설 경우 '생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서울지법이 최근 세녹

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원이 알코올을 첨가한 연료인 세녹스에 휘발유 품질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산자부가 이 세녹스 제품에 대해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 형사 고발하게 된 사안의 본질이 다름 아닌 탈세 여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연료유 첨가제란 수법으로 실제 휘발유를 대신한 연료유로 유통시킨 것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제반 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과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품질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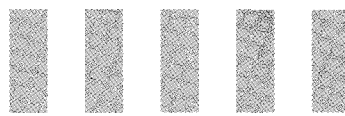
이 같은 산자부의 방침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녹스' 제조사 (주)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세녹스'의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항목(옥탄가)을 제외한 기존 휘발유제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견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내 석유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돼온 연료유 첨가제 '세녹스'는 산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 받아 형사 고발되는 등 정부의 단속을 받아왔으며, 특히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2001년 발암물질 1670t 배출

지난 2001년 각 산업체에서 대기, 토양 등으로 배출한 발암물질은 7종, 1670여t이며 화학물질의 94% 가량은 대기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화학제품, 1차금속 등 23개 업종의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2876개 업체를 대상으로



160개 조사물질 중 제조·사용량이 50t 이상인 116개 물질에 대해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환경으로 배출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112종, 배출량은 3만6600여t에 달했다.

이 같은 배출량은 전년도 3만100여t에 비해 증가한 것이지만 조사대상 업체 및 대상물질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0.05%에서 0.04%로 감소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화학물질 배출량의 94.3%는 대기, 나머지는 토양(4.5%) 및 수계(1.2%)로 배출됐고 물질별로는 톨루엔(13.8%), 자일렌(12.2%), 황화수소(11.7%)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38.4%), 1차 금속(20.6%), 석유정제(8.7%) 등 3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68% 가량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산업단지 배출비중(총 배출량의 81.1%)이 높아 대규모 화학·석유산업단지가 많은 전남(19.6%), 울산(18.7%), 경북(15.8%) 등에서 다량 배출됐다.

또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에 의한 발암물질의 경우 벤젠, 염화비늘 등 7종이 배출됐고 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1670여t(총 배출량의 4.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39.0%), 전남(36.5%), 경북(13%)이 많았다.

배출된 발암우려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9종, 1377t(배출량의 3.8%)이었고 발암가능물질은 디클로로메탄 등 23종 2712t(배출량의 7.4%)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발암(우려)물질 취급량은 2000년 2200만여에서 2001년 2400만여t으로 8% 증가한 반면 배출량은 2000년 8128t에서 2001년 5767t으로, 29%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으로 배출된 물질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경우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4종, 배출량은

150t(총 배출량의 0.4%)으로 지난해에 비해 76% 감소했다.

환경부는 94%에 달하는 대기배출을 줄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조사대상 확대, 조사자료의 신뢰성 제고, 조사결과 공개방법 다양화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물질 및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다양한 배출량 조사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의 배출량조사 기술 지원 방안 강구와 함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40개 물질, 28개 업종의 종업원수 5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중이다.[경향신문]

### 쓰레기 봉투값 '제각각'

서울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제각각이다.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서로 다르다.

지난 10월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가정용 5ℓ의 경우 70~110원씩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와 강남은 5ℓ 짜리가 70원인 반면, 관악구는 110원이다. 중구와 양천은 80원이고, 성동·광진구등 7곳은 90원, 용산·동대문구등 12곳은 100원이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봉투 값을 자치구별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다. 김포쓰레기 매립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구는 가까운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싼 편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에 예산 지원이 많으면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역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하느냐,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강북·노원·양천·강서·강남·송파구등 6곳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수거해 경기지역의 농장이

## 【미디어로 본 환경】

나 퇴비·사료화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된다. 반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나머지 자치구는 80~200원짜리 봉투를 구입해야 한다.

소과·침대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구별로 t당 최고 6만 6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광역소각장 무산위기

경기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등 동부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3일 이들 시·군에 따르면 하루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 주민지원 사업비 등 3백여억원대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두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차 공모에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주민들이 요건(마을 전체 거주주민의 3분의2이상 동의)을 갖춰 신청서를 냈으나 이틀만에 자진 철회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덕평리 주민들이 전체 52가구중 43가구가 동의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이틀만에 신청서를 되가져 갔다"고 말했다.

덕평리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된 1차 공모 때도 신청했으나 마을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으로 구성된 동부권 광역화추진협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재공모하거나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후보지 공모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역소각장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향신문]

### 기업, 환경 NGO활동 긍정평가

기업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환경관련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0월 1일 발표한 "환경 NGO 활동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4.7%가 국내 환경 NGO 활동을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26.0%는 잘하고 있거나, 아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21.3%에 그쳤다.

환경 NGO가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오염행위 감시(35.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책비판(18.4%)과 환경관련 정보제공(1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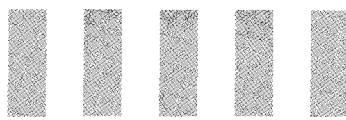
하지만 "기업활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환경 NGO의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NGO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75.0%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긍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13.3%)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11.7%) 보다 다소 많아 기업과 환경 NGO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환경 NGO 활동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은 분야로는 기업이미지 개선(38.0%)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이나 건설과 같은 사업활동(22.0%)과 신규투자(2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음료회사인 A사 관계자는 "폐음료병 수거 및 재활용에 많은 투자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환경 NGO가 이런 기업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환경 NGO와의 관계정립을 위해 추진하



거나 계획중인 활동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9.0%에 그쳐 기업과 환경 NGO간 교류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NGO와의 관계정립을 위한 활동으로는 공동캠페인(38.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례협의체별 구축(29.4%), 재정지원(20.6%), 사업장공개(5.9%)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최근 기업의 윤리 경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환경 NGO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환경 고발 포상금 급증

환경부는 지난 9월 28일 울 상반기 중 전화 128번 등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환경오염 사례가 모두 8만6천9백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1천7백32건에 대해 5억8천3백87만3천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수는 53%, 포상금 지급액은 34.5%가 늘어났다. 이는 단순 신고보다

는 오염행위자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 유치원·학교, 병원성 세균 우글

서울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의 병원성 세균이 일반 가정의 실내공기 평균치 보다 최고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발표한 교육, 보육시설의 공기 중 미생물(병원성 세균) 오염도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은 3천85CFU/m<sup>3</sup>(1 m<sup>3</sup>당 세균군집수), 어린이집 놀이방은 4천764CFU/m<sup>3</sup>, 어린이집 조리실 2천548CFU/m<sup>3</sup>로 조사됐다.

이는 실내공기의 가구당 평균치인 602.5CFU/m<sup>3</sup>보다 학교 교실은 5.2배, 학교 조리실은 2.4배가량 높았으며 어린이집 놀이방은 7.9배, 어린이집 조리실은 4.2배가 높은 수치다.

이를 싱가포르 권고기준치(500CFU/m<sup>3</sup>)와 비교해 보면 학교교실은 평균 6.2배나 초과한 상태였고 일부 어린이집 놀이방은 무려 9.5배나 세균이 많았으며 교실은 10곳 가운데 7곳이, 조리실은 12곳 가운데 11곳이 기준치를 넘겼다.[연합뉴스] ◀

12월

환경 기술인  
실무 교육

## 환경관계법 실무적용 및 단속지침과 적발조치사례

\* 본지 128페이지 참조